미국의 '원화절상 압박' 이유 없다 시로

이종유 한일경제협회 부회장



최근 미국은 한국이 원화가치를 평가절 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이를 견제 하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한국의 원 화는 평가절상돼야 마땅한데 오히려 절 하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미 국은 생각하는 듯하다. 이에 반해 한국 은 원화 환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식 하는 듯하다. 경쟁국인 일본 엔화의 큰 폭 평가절하로 인해 한국 상품의 가격경 쟁력이 약화돼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떨어졌고, 이는 관련 하청기업 상 품의 가격과 내수산업에까지 커다란 영 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.

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환율 압박은 타당한가. 특정 국가가 경상수지 흑자 임에도 불구하고 자국통화를 평가절하 하면 흑자규모가 더욱 확대돼 결과적 으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악화시키 게 된다.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국 통화 의 평가절하 정책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. 그런데 한국의 경상수지 흑 자는 수출증대에 의해서라기보다 수입 축소로 인한 것이다. 즉, 수출은 줄고 있 지만 내수 불황으로 인해 수입이 더 축 소돼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벗어나게 해야 한다.

주목할 필요가 있다.

그러면 한국의 경기침체는 왜 심화되 고 있는가. 주지하는 것과 같이 세계적 불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엔화가치 가 떨어진 탓도 있다. 산업구조의 유사성 으로 인해 한·일 두 나라 상품은 국제시 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한다. 그런데 2012 년 10월 기준 엔화의 대(對)달러 환율이 50% 이상 평가절하됨으로써 한국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치명상을 입었다. 해외시장 의존적인 한국 경제로서는 개 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이에 대처해왔

환율인상 개입 안된다는美 압박 불황형 흑자·한일경쟁 감안하면 엔화대비 고평가된 원화 내려야

다. 이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은 국민경 제 차원에서 보면 가계의 소비억제는 물 론 기업의 투자수요마저 줄이게 된다. 한 국 경제의 이런 대처는 수입수요를 줄이 게 돼 축소균형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. 이는 한국 경제에는 물론 세계 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.

그러면 왜 이런 상태가 초래됐을까. 그 것은 원·엔 환율이 양국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. 따라 서 원·엔 환율을 정상으로 되돌려 한국

한국과 일본처럼 자원이 부족해 가공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는 자국 수 출품의 가격경쟁력에 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.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낮지만 일견 내수기업으로 보이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수출기업과 연동돼 있다. 따라서 엔고로 인해 수출기업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 되면 그 기업은 엔고 극복 차원에서 철저 한 경비절약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.

이런 활동에는 인건비 절감, 부품구입 과 관련한 하청기업에의 대금지급 절감 행위 등이 포함된다. 이런 일련의 활동은 일본 경제 전체로 볼 때 내수축소로 이 어진다.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가 일 거에 40~50% 절상되자 일본 기업들은 고성능 시설투자로 핵심부문의 생산성 을 높임으로써 엔고로 높아진 인건비를 흡수했지만 모든 기업이 원가절감에 나 서 '엔고 불황'이란 구조적 불황구조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.

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, 그 중에서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엔화가치를 비 정상적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선택하 게 된 것은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. 그런데 이런 일본의 선택이 다 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주름살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. 이 같은 논리가 타당하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원화절상 압력은 결 과적으로 비정상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 래한다.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서도 엔화에 비해 지나치게 절상된 원화 기업으로 하여금 무리한 구조조정에서 가치를 끌어내리는 노력은 정당화돼야 할 것이다. leejy@hufs.ac.kr